

국내 친환경 양돈산업의 현 주소



오 상 집 교수
강원대학교 사료생산공학과

1. 친환경 양돈이란?

국내 양돈업의 사육규모나 환경에 미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양돈업을 친환경 산업화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친환경 양돈 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친환경 양돈이란 양돈행위를 통하여 환경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양돈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양돈을 말한다. 상기 친환경 양돈의 목표 중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향상 문제는 비단 친환경 양돈이 아니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안이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립한다는 목표는 이를 단기간에 평가하기도 어렵거니와 단순지표만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친환경 양돈의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양돈 분뇨 친환경처리의 현실

주어진 환경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돈 산업으로부터 오염 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거나, 배출된 오염물질은 자연 생태계의 순환역량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양돈 대책의 주요 근간으로 발생된 돈분뇨를 액비 또는 퇴비로 토양에 환원하는 대책을 장려하고 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자기 손해나 신규 투자가 없이
막연히 친환경으로 가야한다는 수준의 문제 인식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기존 양돈의 경제성과 비교하여 제기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즉 친환경 양돈에 투자 하느냐의 여부는 미래형 양돈 수익 모델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우선 토양을 통한 분뇨의 자연 순환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듯이 바람직한 대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이를 통하여 국내 친환경 양돈의 현 주소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현재 양돈 분뇨의 친환경 순환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 대책이 이를 시행해야 할 양돈 농가에게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양돈농가의 관점에서 양돈분뇨 친환경처리의 어려운 점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양돈 분뇨 친환경 처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투자해야 할 노력과 비용에 비하여 친환경 양돈 관련 지원비용이 충분하지 못하다.
- ② 친환경 분뇨처리를 위한 요구조건이 비현실적이다.
- ③ 분뇨 및 악취관련 법규나 규칙이 과다하고 비현실적이다.
- ④ 악취를 비롯한 각종 민원해결 과정이 너무 벅차다.

⑤ 기존 양돈 대비 친환경 양돈의 차별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회의적이다.

3. 친환경 양돈을 지향하는 양돈 농가의 문제점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친환경 양돈의 관련 당사자인 행정당국, 생산자, 소비자(주민) 별로 되새겨 보자. 먼저 양돈 농가의 경우 양돈 산업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자기 손해나 신규 투자가 없이 막연히 친환경으로 가야한다는 수준의 문제 인식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더 이상 기존 관행 양돈의 수익성 분석 방식에 따라 친환경 양돈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존 관행 양돈에서 추구하던 수익 모델이 앞으로 얼마가지 않아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공멸 모델로 추락하게 될 것을 하루 빨리 인식하여야 한다.

향후 양돈 산업의 수익 모델이 친환경 양돈을 기본 전제로 할 수밖에 없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친환경 양돈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존 양돈의 경제성과 비교하여 제기하는 것은 미래를 내



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즉 친환경 양돈에 투자 하느냐의 여부는 미래형 양돈 수익 모델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4. 친환경 양돈 정책의 문제점

정책의 수립과 시행 또는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 친환경 양돈 대책이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그 대책이 주로 민원 발생 억제 관점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친환경의 근본 취지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국토환경의 오염저하와 지속성 확립일 것이다.

그럼에도 실질 대책은 단기적인 환경 민원 예방의 관점에서 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농촌 진흥지역에 신규 축사시설을 불허한다든지, 수변지역 등 각종 규제지역의 고시에 고심한다든지, 두당 분뇨 환원 면적의 과소문제에 갑론을박하는 모습 등은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이지 궁극적으로 양돈 분뇨의 토양 환원 처리를 통한 친환경 양돈의 정착을 권장하려는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 당국이 각 계층의 민원과 고충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나 일시적 민원 제기가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적이지 않다면 그 계

층을 계도하면서라도 올바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친환경 행정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적합한 친환경 양돈의 입지과정에서 야기되는 민원을 생산자가 스스로 해결하게끔 미루는 풍토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행정이 누적될 때 친환경 양돈을 실제 시행해야 할 생산자의 추진의욕은 더욱 사라질 뿐만 아니라 행정 주체의 추진 대책도 불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친환경 대책에 관련한 각 행정 주체 간 대책이 합목적적이어야 하고, 서로 상충되는 점이 없어야 하며, 모든 대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친환경 양돈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위하여 농림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축산 분뇨를 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책과 폐기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책이 서로 합목적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재활용이 가능한 축산분뇨는 오염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토환경에 오염부하비중이 오히려 높은 화학비료에 대한 대책수립에 미진하다면 축산 분뇨 처리가 100% 친환경화 하더라도 친환경 국토의 회복과 지속은 요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투입에 관한 규제와 가축분뇨 토양환원 권장 대책은 정책의 추진 효과 측면에서 서로 가역적이고 가축분뇨의 토양환경 처리로 토양의 지력이 회복되면 화학비료의 요구수준은 더욱 낮아진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과 과학적 논리는 현실적 대책수립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비중에 따라 균형 있는 친환경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 행정 전략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국토환경을 거론할 때 환경 마스터플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마스터플랜이 갖는 의미는 이를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관련된 행정 시스템도 목적에 따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축산대책의 추진과정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처간의 상충은 물론, 지자체의 개별 조례와 의결,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등을 감안하면 친환경 축산 대책의 일관성, 전국토를 총괄하는 친환경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중심 추진주체에서는 먼저 추진 체계상의 비효율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논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정성껏 계도하여야 할 것이다.

5. 친환경 양돈의 수혜자인 주민과 소비자의 의식

친환경 양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주민과 소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주민과 소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은 주민이 친환경 양돈의 단순한 요구자 또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친환경 양돈의 추진 과정에서 생산자가 언급한 어려움의 하나가 민원문제라는 사실은 역으로 주민과 소비자가 조금씩 도와주고 양보하면 크나큰 어려움 하나가 해소되어 친환경 양돈이 권장됨을 뜻한다.

그렇다면 주민과 소비자가 친환경 양돈의 정착을 위하여 협조할 사항은 무엇일까? 주민

과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결과도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친환경 양돈뿐 아니라 친환경 국토 전략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선 친환경 양돈이 궁극적으로 주민과 소비자를 위한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주민과 소비자의 시각이 민주적이라고 해서 통찰의 시각을 갖고 있으며 '친환경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경우 악취발생, 이미지 저해 등을 주된 이유로 친환경 양돈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양돈이 친환경화할 경우 악취 및 해충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과학적 현실을 인식하고, 정착 단계까지는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해 주는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홍보와 언론매체의 앞선 이해와 계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친환경 양돈의 현 주소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우선 행정 당사와 생산자의 원론적 측면에서는 친환경 양돈이 추진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서는 이를 추진할 행정 당사자, 생산자, 주민과 소비자를 아우르는 친환경 양돈 대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친환경 양돈의 원리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양돈을 향해 나아가야 할 다양한 추진 주체들의 추진동력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제각기 동력음만 요란한 실정이다. 이제 친환경 양돈을 향한 에너지를 하루빨리 실질대책으로 구체화해야 할 때다. **양돈**